

국토일보 [인물포커스] 2012. 3. 5

## 김승철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회장

### “구조설계 용역비 현실화 시급합니다”



#### “구조설계 용역비 현실화 시급합니다”

미국·영국 등 선진국 대비 20%도 안 돼, 1천 여 건축구조 기술사 자금심 살릴 때

“구조안전 전문가로서 국내 최고의 엔지니어들이 국익에 보탬이 되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1,000여명의 건축구조기술사는 전문능력을 심분 발휘하고 사회기여도를 높이는데 혼신을 다 할 것입니다.”

제13대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수장으로 취임한 김승철 회장. 신임 회장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그동안 닦아 놓은 기반을 바탕으로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이 그의 취임 소감이다. 특히 김 회장은 갈수록 불안과 공포가 심화되는 지진문제와 관련 2층부터 6층까지의 저층건물이 더 심각하다고 전제, 보다 완벽한 제도적 개선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구조기술사회는 새 집행부에서 기존 홍보위원회를 조사홍보위원회로 기능을 대폭 확대 개편하고 재난 시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회장은 터무니 없이 낮은 용역비가 건축구조기

술 사무소의 경영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용역비 현실화가 시급한 당면과제라고 주장했다.

“최소한 설계비의 10% 정도는 돼야 합니다. 미국, 영국 같은 선진국의 경우 20%, 25%까지 제도화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은 지금 3%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정, 관, 산, 학 등 관계기관의 냉철한 현실진단이 필요한 대목이 아닌가!

깊은 고민과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아울러 김 회장은 건축설계 관련 단체와도 상호 협력할 여지가 많다고 판단하고 양 단체 및 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충분한 대화를 통한 상부상조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신임 김 회장은 30년 건축구조 전문가다. 싱가포르 창이공항 등 해외유수 프로젝트 구조설계 업무를 수행하면서 안전의식의 체계화된 현장상황을 보고 듣고 경험해 온 전문가이다. 국민생명을 책임지며 최후 보루 역할을 맡고 있는 전문가이자 경영자로서 주어진 책임과 권한을 보면서 김 회장은 그들의 선진국형 시스템을 존중했다.

이제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장직에 취임한 현재 그가 추구하는 것은 ‘최고의 라이선스 담게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구조기술사’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는 인터뷰를 마치며 1,000여 회원들에게 당부의 메시지를 던진다.

“회원사 간 정당한 경쟁분위기를 만들어 모두가 잘 사는 구조기술사가 되고 회원사 모든 임직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당당한 전문가로서 하나가 돼야 합니다.”

현재 안전에 대한 국민의식은 비교적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다.

이에 발맞춰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안전정책도 국민의식에 상응하는 정책으로 함께 개선돼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때다.

김광년 기자 knk@ikld.kr

## 되풀이 되는 붕괴사고, 철거 안정 규정 없어



### <앵커 멘트>

건물을 철거하다 무너지는 사고가 자주 터질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건물 지을 때는 허가가 까다롭지만 철거할 때는 신고만 하면 됩니다. 안전규정이 허술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습니다.

### <리포트>

지난해 7월 천호동 붕괴사고 2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8월 창동 붕괴사고, 4명 매몰.

모두 건물 안에서 철거작업을 하다 무너졌습니다.

오늘 사고가 난 건물도 신축하기 위해 꼭대기 층부터 철거하던 중이었습니다.

6층에는 철거 잔해가 그대로 쌓여있고, 29톤짜리 굴삭기도 있었습니다.

<녹취> 이기윤(서울 강남소방서 행정과장) : "위에 있는 잔해물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그 층이 무너지고 그 무게에 의해서 다음층이 무너지고 연속적으로 무너진 겁니다."

윗층을 철거하는데도 인부들은 별다른 안전 장치 없이 아랫층에서 일했습니다.

철거작업은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가능합니다. 안전장치를 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다보니 관행적으로 작업이 이뤄져왔습니다.

작업 전 위험 진단을 받거나 안전기둥을 세우게 하는 것 같은 규정도 없습니다.

<녹취> "(안전 지도는 전혀 없는 거네요?) 그런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건물 철거에도 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이상원 (건축구조기술사회 홍보이사) : "제도적으로 준비를 해서 전문가한테 확인을 받은 다음에 철거공사를 하는게 이런 불상사를 막을 수 있는..."

건물 철거 신고서에는 위치와 날짜 등 기본적인 사항만 기재하면 됩니다

KBS 김도영 기자